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여 수 시 장

1. 예 고 명: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2. 예고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부방침에 따라 2021. 7. 12. (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대상

구 분	지 번	면 적	주차면수	비 고
여수 동초등학교	여수시 공화동 1154-1	20.50㎡	2면	총 10면
여수 서초등학교	여수시 서교동 869	100㎡	7면	총 7면

다. 추진근거: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개정 및 시행(2021. 7. 13.부터)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4. 공고방법: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 예고)

6. 예고기간: 2021. 5. 3.(금) ~ 5. 24.(월) / 21일간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21. 5. 3.(금) ~ 5. 24.(월)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여수시 교통과

1)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2) 전 화 : 061) 659-4150

3) 팩 스 : 061) 659-5837

붙임 1. 의견서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1] 의견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5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호명동 912-1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호명동 912-1	13.7	6	81		
호명동 913-2	21	6	132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3.

여 수 시 장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여 수 시 장

1. 변경지정일 : 2021년 5월 3일
2.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 마을명 : 화정면 백야마을
 -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백야로 156-7번지 일원
3. 대표자(변경)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임 ○ 록
 - 주 소 : 여수시 화정면 백야1길 **
4. 사업개요
 -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 식당운영
 - 민박운영
 - 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5. 준수사항 : 불임참조

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사업자는 「백야어촌체험 · 휴양마을」 운영시 아래 지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 가. 사업자는 「백야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어촌체험 · 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여수시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본 지정서는 「도농교류 촉진법」에 의한 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위한 것일 뿐, 그 외의 사항은 별도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 ·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산관리

- 가.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 나.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백야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마.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도·농 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나.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 상기 사유 이외에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 가.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

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시장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시장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사업자는 「백야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①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④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호'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백야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시설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 청소료 등> 등)은 백야 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마.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백야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바.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들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별표4]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시설이 있을 시는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 자.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차. 시장은 「백야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은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되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 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추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별첨 2]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별첨 3]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태료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2	5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40만원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만원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40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20만원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1호	30만원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3	100만원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 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2호	50만원

비고 :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